

거시경제 교과서와 공식 통계의 불일치 : 국민소득(NI)을 중심으로

남 재 현*

【요약문】 본 연구는 NI 지표를 사례로 교과서 정의와 공식 통계 간 불일치 및 학습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교과서들은 2003년 NIPA를 개편한 BEA의 정의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를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분배 분석의 필요에 따라 이를 차감한 요소비용 기준 NI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NI는 명칭만 동일할 뿐 개념과 산식이 상이하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학습자가 개념 이해, 산식 해석 및 국가 간 통계 비교 과정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와 통계 간 불일치가 양국 기관(BEA·한국은행)의 제도적 선택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둘째, 지표 해석의 어려움이 학습자 오개념이 아닌 통계 체계의 구조적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제교육의 과제가 단순 지표 암기를 넘어 통계 체계와 비교가능성의 한계까지 다루는 데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민소득, 국민계정체계, 경제교육, 경제이해력, 거시지표교육

* 주저자/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nahm@kookmin.ac.kr).

I. 서론

바람직한 경제교육 특히 거시경제교육은 단순한 개념과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과 ‘데이터 문해력(data literacy)’을 함양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대학 학부 거시경제학 수업 학습자들은 거시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에 종종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거시 지표 통계치는 단순히 주어진 절댓값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적 목적과 제도적 환경이 반영된 ‘국가별 운영모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 교과서의 거시 지표 정의와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거시 지표이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정의와 산식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학 학부 교과서 정의와 공식 통계 지표 간의 불일치 현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학부 거시경제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의 거시 지표가 각국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미국 교과서를 사용한 학습자들이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를 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혼란과 국가 간 통계 비교의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과 혼란은 개별 학습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특정 거시 집계 변수인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으로 한정해서 논의한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교과서상에서도 국민소득이라는 표현은 특정 통계 지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 또는 소득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NI는 일반어로서의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계정체계 내부의 특정 집계 항목을 지칭하는 고유 명칭이다. 이러한 NI는 한국은행과 미국 BEA 등 대부분 국가의 국민계정체계 상에 일정 위계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거시 집계 항목이다. 이러한 특정 지표로서의 NI는 교과서상의 정의와 공식 통계 지표상의 잠재적인 불일치 문제와 국

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의 한계라는 두 핵심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시 지표이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정의가 비교적 일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GDP 또는 GNI 등과 같은 다른 거시 지표들과 달리 특정 지표로서 NI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논문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한국 및 미국 공식 국민계정 체계 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민계정체계의 국제적인 변화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UN 등이 제정한 SNA 지침서와 그 주요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변화에 대응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를 미국 BEA의 NIPA 편람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5)』 책자를 중심으로 교차 비교하여 국가별 운영모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실제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가 접하는 NI의 정의와 산식을, 국내 학부 초급 거시경제학 강좌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미국 교과서 중 하나인 Mankiw의 『거시경제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 이해력과 데이터 문해력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민계정 통계의 해석과 오용 가능성, 그리고 학습자의 인식과 경제 교과서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명확히 한다. III장에서는 연구 분석 대상으로서의 NI에 대하여 그 개념과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러한 NI 지표의 학술적인 의의 및 교육적인 의의에 대하여 고찰한다. IV장에서는 국민계정체계의 국제기준 변화를 1993 SNA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한 미국 BEA의 2003년 NIPA 개편과 한국은행의 요소비용 기준 NI 유지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한다. V장에서는 미국 교과서 정의와 한국은행 통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개념 차원, 산식 차원, 국가 간 비교 차원에서 살펴봄에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VI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경제 이해력과 데이터 문해력

경제교육의 목적은 경제학의 개념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그 핵심은 경제 개념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에 있다.

Hansen et al.(2002)은 미국 대학 학부의 경제학 원론 수업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식으로 다루면서 정작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현재 경제학 교육은 개인적·직업적·공적 생활에서 경제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며, 지나치게 많은 수업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이들은 경제 이해력을 “비용과 편익을 기술하고, 경제 현상을 설명하며, 경제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 평가 기준은 단순히 개념을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경제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데이터 문해력(data literacy)으로 확장되고 있다. Halliday(2019)는 대학 학부 경제학 교육이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데이터 문해력을 통계 문해력이나 경제 이해력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역량으로 보고, 이를 “데이터를 읽고(read), 생성하며(create), 정보로서 전달하는(communicate) 능력”으로 정의한다. 동시에 데이터 문해력은 경제 이해력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 이해력과 데이터 문해력의 관점을 NI 지표 해석에 적용한다. 학습자가 NI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NI의 교과서적 정의를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지표가 어떠한 자료와 산식, 제도적 선택을 거쳐 산출되었는지 이해하고 그 결과물로서의 수치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Hansen et al.(2002)이 말한 “적용 능력”과 Halliday(2019)가 말한 “데이터를 정보로 읽어내는 능력”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2. 국민계정 통계의 해석과 오용

국민계정 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시경제 자료이지만, 그 개념적 틀과 작성 원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경우 쉽게 오용될 수 있다. Bos(2006, 2007)는 통계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계정 문해력(national accounts literacy)'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는 경제학계와 정책 현장에 확산된 '국민계정 문맹'이 단순한 교육적 결손을 넘어 정책 판단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즉,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정책 결정은 결국 잘못된 나침반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Bos(2006)가 제시한 ‘보편 모형(universal model)’과 ‘국가별 운영모형(national operational model)’의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기준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해당국의 자료 출처·정책 목적·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해 활용한다. Bos는 국제기준이 일종의 메뉴와 같다고 보면서, 모든 나라가 공통의 요리를 일부 공유하면서도 자국의 필요와 자원에 따라 보충적 항목을 선택적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살펴볼 것처럼, 한국은행이 GDP와 GVA에서는 SNA의 표준을 수용하면서도, 분배 분석의 필요에 따라 요소비용 기준의 NI를 별도 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을 학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Bos(2006)는 기초가격이나 요소비용에 기반한 평가가 상이한 가중치 구조를 만들어 내며, 어느 것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¹⁾. 이러한 평가 기준의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채택하는 제도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한국과 미국의 NI 정의 차이를 ‘오류’가 아니라 ‘각국의 분석 목적과 제도적 선택의 차이’로

1) “Valuation at basic prices or factor costs will result in a somewhat different weighting scheme, i.e. reducing the weight of highly taxed products and increasing the weight of highly subsidised products. Whether these alternative weighting schemes are fundamentally bet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is to be doubtful” (Bos, 2006, p.231)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Bos(2007)는 이러한 논의를 통계 사용자 측면에서 더욱 정교화한다. 그는 국민계정 통계가 오용되는 다양한 경로를 본문 곳곳에서 다루며, 본 연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형으로 각국의 고유한 개념·작성방법·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책 결정과 통계 해석의 왜곡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그는 동일한 명칭의 지표라도 작성 범위와 측정 방법이 다를 경우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나아가 각국의 국민계정 통계를 모아 놓은 국제 데이터베이스가 의미, 비교 가능성, 한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통계의 오용과 오해를 조장하는 ‘통계적 범죄(statistical crimes)’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Bos(2006, 2007)의 연구는 본 논문의 문제 의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은행의 NI 지표와 BEA의 NI 지표는 동일한 명칭인 National Income과 약어 NI를 사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계정체계 상 상이한 정의와 산식 및 제도적 목적을 가진 통계치이다. 이러한에도 학습자가 이 두 지표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양자를 비교하거나, BEA의 NI 지표를 설명한 미국 교과서의 정의 그대로 한국은행의 NI 지표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Bos가 지적한 국가별 개념과 작성 방법 및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해석상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Bos의 국민계정 문해력에 대한 연구 중 이 논점을 NI 지표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교과서 체계의 한계와 거시 지표 교육

학습자가 거시경제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특히 Goffe(2013)는 학생들이 교실에 ‘백지(blank slate)’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시지표에 관한 사실적 오개념(factual misconceptions)을 이미 형성한 채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실제 조사에서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응답 25% vs 실제 231%), 실업률(12% vs 7.2%), 물가상승률(11% vs 0.09%) 등 학생들의 인식은 현실과 큰 괴리를 보였다. 이에 Goffe는 수업 중 기초 거시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이 격차의 본질이 학생의 부주의가 아닌, 용어의 일상적 의미를 과학·학술적 의미와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인식론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Goffe가 지적한 ‘일상어 의미와 과학적 의미의 충돌’ 구조

와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발생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가 다루는 NI 사례는 학생이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충실히 학습한 결과로 형성한 ‘교과서적 NI 정의’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NI 통계의 ‘제도적 정의’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는 어려움은 학생의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별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차이라는 객관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 경제학 교과서의 한계에 대한 기존 연구와도 차별성을 가진다. Bowles and Carlin (2020)은 표준적인 경제원론 교과서들은 현대 경제학 연구의 최근 추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이 교과서들은 학술 저널이나 대학원 교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연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강생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세계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NI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미국의 표준 거시경제학 교과서²⁾는 미국 BEA의 NI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학습자 해석의 어려움은 ‘교과서의 단순화·추상화’ 때문이 아니라, 미국 교과서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미국 BEA의 NI 정의와, 한국은행이 분배 분석의 목적상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요소 비용 기준 NI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국가 간 통계 체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요컨대 Goffe(2013)는 학습자가 거시지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고, Bowles and Carlin(2020)은 교과서가 현대 경제 연구와 단절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동일한 명칭의 통계지표가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정의 아래 작성될 때, 한 국가의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가 다른 국가의 공식 통계 수치를 해석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I 사례는 바로 이 학술적 공백 위에 위치한다.

4. 본 연구의 학술적 위치와 기여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먼저 Hansen et al.(2002)의 경제 이해력 논의는 경제교육의 목적이 개념의

2) 예를 들어 Mankiw의 거시경제학

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경제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어 Halliday(2019)의 데이터 문해력 논의는 그 적용 능력이 실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경험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Bos(2006, 2007)의 국민계정 문해력 논의는 통계지표가 어떠한 제도적 맥락과 작성 목적 아래 산출되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동일한 명칭의 지표라 하더라도 쉽게 오해되고 오용될 수 있음을 정교하게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Goffe(2013)와 Bowles and Carlin(2020)은 각각 학습자의 인식과 교과서 체계라는 두 측면에서, 거시지표 학습이 실제로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인식론적·구조적 어려움 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문제 유형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Hansen et al.(2002)과 Halliday(2019)는 경제·데이터 문해력이라는 일반적 역량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할 뿐, 특정한 거시지표가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정의·작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Bos(2006, 2007)는 국민계정 통계의 오용 가능성과 국가별 운영 모형의 차이를 일반론적 수준에서 정식화하지만, 특정 지표를 사이에 둔 양국 통계 체계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겪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Goffe(2013)는 학습자가 거시지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지만, 그 왜곡의 원천을 학습자 개인의 일상적·직관적 인식에서 찾을 뿐, 국가 간 통계 체계의 제도적 차이가 빚어내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다루지 않는다. Bowles and Carlin(2020) 또한 교과서가 현대 경제 연구의 흐름과 단절되어 있음을 비판하지만, 교과서가 자국 통계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가 다른 국가의 공식 통계를 해석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그들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제 영역에 자리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I 지표 해석의 어려움은 학습자의 부주의나 일상적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교과서가 자국 통계기관의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학습자가 미국 교과서가 충실히 반영한 BEA의 NI 정의에 따라 NI 개념을 정확히 학습한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분배 분석의 목적상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요소비용 기준의 NI 통계 수치를 마주했을 때 발생한다. 즉 본 연구가 분석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인식 오류’도 ‘교과서의 단순화·추상화’도 아닌, 동일한 명칭의 통계지표가 국가별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작성되는 구조적 조건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해석상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자가 NI를 ‘국민소득 일반 개념’으로 오인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NI를 특정 통계지표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적 정의와 공식 통계 수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불일치를 단순한 용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그 차이를 1993 SNA 이후의 국제기준 변화와 미국 BEA·한국은행의 상이한 제도적 선택이라는 맥락 위에서 해석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경제교육의 과제가 지표 명칭의 암기를 넘어, 지표가 위치한 통계체계와 국가 간 비교가능성의 한계까지 함께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경제 이해력·데이터 문해력 논의와 국민계정 문해력 논의를 NI 지표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거시지표 학습에 관한 기존 논의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국가 간 통계체계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어려움’이라는 새로운 문제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III. 국민소득(NI)의 개념과 의의

1. NI의 개념과 국민계정체계 내 위치

일상에서만뿐만 아니라 경제 교과서상에서도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이라는 표현은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 또는 소득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의 국민소득은 특정 통계지표가 아니라 거시 경제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명칭에 해당하며 GDP, GNP, GNI, NNP, NI, PI, DPI 등 다양한 거시 지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과 미국 BEA 및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 교과서는 일반어로서의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계정체계 내부의 특정 집계 항목을 지칭하는 고유 명칭으로 국민소득을 사용하고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층위 중 각국 국민계정체계 내부에서 특정한 정의와 산식을 가진 통계 지표의 의미로서의 국민소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사용하는 “NI”라는 표현은 일반 용어로서의 국민소득을 의미하지 않고, 이러한 특정 통계지표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NI를 ‘요소비용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으로 명시적으로 정의³⁾하며, 이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총량을 측정하는 집계 항목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의 NI는 분배국민소득의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노동에 귀속되는 소득), 영업잉여(자본에 귀속되는 소득), 혼합소득(자영업자 등 노동·자본 혼합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함으로써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생산요소 귀속소득만을 분리하는 평가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의 학술적 의의는 2절에서, 학습자 관점에서의 교육적 의의는 3절에서 다룬다.

<표 1>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상 주요 지표의 위계

	정의 (개념)	산출 산식
GDP (국내총생산)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 총합	GVA(기초가격 부가가치) + 순생산물세
GNI (국민총소득)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GDP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NNI (국민순소득)	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순개념의 국민소득	GNI - 고정자본소모
NI (국민소득)	요소비용 기준 국민소득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	NNI - 순생산 및 수입세
PI (개인분원소득)	가계 부문이 실제로 수취하는 소득	NI에서 가계 귀속분 조정
DPI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가 실제로 소비·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	PI - 조세 등 경상이전 순액

자료: 한국은행(202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에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국민계정은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의 삼면등가 원칙에 기반하여 작성되며, 한국은행 NI는 그 삼면 가운데 ‘분배국민소득’의 한 집계 항목으로 정의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시지표 위계상 NI는 GDP(시장가격), GNI(국외

3) “국민소득은 시장가격과 요소비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먼저 요소비용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은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이라고도 하며 생산 활동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5), pp. 198).

순수취 요소소득 반영), NNI(고정자본소모 차감), NI(순생산 및 수입세 차감, 요소비용 기준)의 순서로 산출되며, 이러한 위계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다.⁴⁾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상의 특정 통계지표인 NI를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NI(National Income)’라는 약어는 미국 BEA의 NIPA 체계에서도 통계지표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양국의 NI는 동일한 약어 아래 서로 다른 통계적 실체를 가리킬 수 있다. 양국 NI 정의 차이의 구체적 분석은 IV장에서 다루며, 본 절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본 연구가 양국 NI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한국은행 NI’와 ‘BEA NI’로 표기한다는 점만을 명시한다.

2. NI의 학술적 의의

학술적 관점에서 GDP는 생산 측면의 총량을, GNI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총량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지만, 동 지표들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성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반면 한국은행 NI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혼합소득 등으로 분해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분배 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시지표로 기능한다. 따라서 NI는 거시경제 분석에서 분배 측면을 다루기 위한 통계적 매개로서의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NI는 최근의 거시경제학 및 노동경제학의 여러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동화와 이로 인한 고용구조 등의 변화가 임금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변수는 노동 분배율(labor share)이다. 이 수치는 그 개념상 요소비용 기준의 분배국민소득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통상 이를 계산할 때 그 분모로 NI를 사용한다. 즉, NI라는 지표는 교과서상에만 소개되는 의미 없는 하나의 집계 변수가 아니라 최근의 경제학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NI는 국민계정의 국가별 평가 체계 선택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기도 하다.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Bos(2006)는 기준 가격을 사용하느냐 또는 요소비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자 간 상이한 가중치가 적용되게 되지만 어느 체계가 근본적으로 더 바람직한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가별 평가 체계는

4) IV장의 <그림 1> 참조(한국은행(202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의 <그림 IV-2>, pp. 197 재인용).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별 분석 목적에 기반한 제도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NI를 NNI처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요소비용으로 평가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Bos(2006)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사례인 것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요소비용에 기반한 NI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 장에서 살펴본 Bos(2006)의 국가별“운영모형” 선택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IV장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과 미국과의 비교 등을 보다 상세히 다룬다.

3. NI의 교육적 의의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은 학부 초급 거시경제학 수업에서 접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 개념 중 하나이다.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업 시간에 이론적인 항등식으로서만 제시되고 있어 학생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행의 NI 지표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이러한 국민소득 삼면등가 법칙의 분배 측면을 보여주는 집계 변수이다. 그러므로 NI는 학생들이 삼면등가 법칙을 구체적인 통계치와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표준적인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일반 용어로서의 국민소득 관련 거시 집계 변수들을 GDP, GNP, NNP, NI, PI, DI의 위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위계상에서 NI는 생산된 소득에서 개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으로 개념이 전환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NI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NNP에서 NI 그리고 NI에서 PI로 이어지는 위계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NI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국민소득 관련 거시 집계 변수들의 위계를 학습하는데 주요한 중간 변수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II장에서 살펴본 경제 이해력 및 데이터 문해력 교육과 관련한 NI의 교육적 의의도 존재한다. NI 지표는 현재 단일한 정의가 아니라 국가별 상이한 정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가의 국민 계정 체계에 대한 제도적 선택에 기반한 상이한 다층 체계와 국제적 표준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경제 이해력 및 데이터 문해력 교육에서 요구되는 “경제 지표의 생산 과정과 제도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위한 사례로서 본 지표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V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NI 지표는 국가간 통계 비교 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의미를 가진다. 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계정상의 “National Income” 또는 약어 “NI”는 현재 한국은행과 미국 BEA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통계 지표이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양자간에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동 지표가 학습자에게 국제간 통계 비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본 지표의 교육적 의미만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양 국가간의 정확한 정의의 차이나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겪을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이후 V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 분석 대상으로서의 NI

본 연구에서는 일반 용어로서의 국민소득이 아닌 특정 통계 지표인 국민소득을 NI로 한정적으로 지칭하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학생들이 NI를 일반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지표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지표로서의 NI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교과서상의 정의와 공식 통계 지표상의 잠재적인 불일치 문제와 국가간 통계 비교 가능성의 한계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시 지표이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정의가 비교적 일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GDP 또는 GNI 등과 같은 다른 거시 지표들과 달리 특정 지표로서 NI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IV. 국제기준 변화와 미국 및 한국의 제도적 선택

1. 1993 SNA 이후 국제기준의 변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는 회계 기간 중 국민 경제 전체와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적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 제정된 통계의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 편제

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준인 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1968 SNA, 1993 SNA, 2008 SNA 그리고 가장 최근 2025 SNA가 공표되었다⁵⁾.

이 중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금융산업 발전, 국제 무역 규모 확대, 정부 역할 변화 등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발표된 1993 SNA의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는 중요한 변화는 부가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격(basic price)을 평가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UNSD 지침서에서도 “1993 SNA recommends using basic prices for the valuation of value added”로 명확하게 서술⁶⁾하고 있다⁷⁾. 전통적으로 국민소득 정의의 핵심 개념이었던 요소비용(factor cost) 평가는 1993 SNA 개정으로 더 이상 국제기준의 명시적 중심 개념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요소비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생산에 대한 순세금(taxes less subsidies)을 차감하여 도출될 수 있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전락하였다⁸⁾.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Bos(2006)는 요소비용 평가가 시장가격 평가보다 근본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 행위에 대한 표준적인 경제 이론은 요소비용 기준이 아니라 세 후 기준의 기업 이윤 극대화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이후 2008 SNA도 여타 항목을 조정하되 기초가격 중심의 평가 체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 미국 BEA의 2003년 NI 재정의

미국에서는 국민계정을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가 NIPA(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라는 명칭으로 작성한다. BEA의 NIPA상에서 국민소득(NI)은 GDP, GNP, NNP, NI, PI, DI의 순서로 이어지는 위계의 중간에 위치하며 구체

5) 1993 개정부터는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

6) UNSD, UN National Accounts Questionnaire 1993 SNA Supporting Booklet, 2010, 7쪽

7) Bos(2006)는 기초가격 도입의 이론적 토대로 1961 Richard Stone의 보고서를 꼽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GDP는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평가됨.

8) “Gross value added at factor cost is not a concept used explicitly in the System but it can easily be derived by subtracting the value of any 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ion payable out of gross value added”(UNSD, UN National Accounts Questionnaire 1993 SNA Supporting Booklet, 2010, 20쪽)

적으로 NNP에서 통계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를 제외한 값으로 정의된다⁹⁾.

실제 2003년 이전에는 BEA의 NI는 거주자의 노동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요소 소득 중심으로 정의되어 간접사업세와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한 순세금은 포함되지 않았다¹⁰⁾. 그러나 BEA는 2003년 NIPA에 대한 포괄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정의와 분류, 표현, 그리고 통계 및 방법론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여러 변화 중 본 연구와 관련한 중요한 개편은 NI에 대한 정의를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순소득의 합계”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NI에 제외되었던 간접사업세 등은 순세금 항목으로 고려되어 NI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정부에 대한 세금이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의 항목이 NI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되게 된 것이다. 현재 BEA NIPA의 NI는 피용자의 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자영업자 소득(proprietors' income), 임대소득(rental income of persons), 기업이익(corporate profits), 순이자(net interest), 순세금(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less subsidies), 사업 이전지출(business current transfer payments), 정부기업 경상흑자(current surplus of government enterprises)의 합으로 산출된다¹¹⁾.

이렇듯 미국은 2003년 NIPA 개편을 통하여 요소비용 중심의 개념인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에 추가로 정부에 귀속되는 순세금¹²⁾을 추가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소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NI의 정의를 바꾼 학술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BEA의 NI 정의 변경은 1993 SNA 개정을 통하여 기초가격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변화시킨 국제 기준에 대한 정합성 강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BEA, NIPA Handbook, Chapter 2 “Fundamental Concepts”

10) “The current definition of national income consists of “factor incomes”—that is the incomes accruing to labor and property of U.S. residents. National income will now also include “nonfactor charges”—that is, business transfer payments, indirect business tax and nontax liabilities, and the current surplus of government enterprises less subsidies.”(Moulton, B. R., and E. P. Seskin (2003), Preview of the 2003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Changes in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Survey of Current Business, p. 31).

11) BEA, NIPA Handbook, Chapter 2 “Fundamental Concepts”.

12) 순세금이라는 용어는 최근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음.

3. 한국은행의 요소비용 기준 NI 유지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추계에 있어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수용하여 2008 SNA에 기반해 GDP는 시장가격으로, 부가가치(GVA)는 기초가격으로 측정한다¹³⁾. 그러나 전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NI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의 흐름 또는 앞 절에서 살펴본 미국 BEA의 결정과 상이한 선택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NI는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국민계정을 설명하는 공식 단행본인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5)”상의 주요 국민소득지표간의 포괄범위 비교를 위한 그림을 재인용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우선 “국민순소득(NNI)=시장가격 국민소득” 그리고 “국민소득(NI)=요소비용 국민소득”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NI는 NNI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부분임을 그림의 수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 단행본의 198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이라고도 하며 생산 활동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경영, 토지 등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다. 시장가격 국민소득은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과 동일하며 요소비용 국민소득, 즉 국민소득(NI)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듯 전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기준과 미국 BEA의 경우 더 이상 요소비용에 기반하여 NI를 집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여전히 요소비용 기준으로 NI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선택을 국제 기준의 위반으로 보기보다는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국가별 운영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Bos(2006)의 주장처럼 한국은 국제 기준을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보충적 항목을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이며, 요소비용과 시장가격 기반의 평가가 어느 것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평가 방법은 아니므로, 한국의 선택은 오류가 아니라 특정한 분석을 위한 제도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요소비용 기준 NI를 유지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설명과 활용 목적을 고려하면 분배 분석의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13) 한국은행(202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수 있다. 한국은행은 NI에 대한 설명에 “생산 활동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 또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경영, 토지 등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등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가격 기준과 달리 요소비용을 기준으로 측정된 NI는 정부 부문에 귀속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 부문이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자본소득 비중과 같은 분배 구조 분석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한국은행 NI의 정의

<그림 IV-2-1>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 비교¹⁾(2023년)

(단위 : 조 원)

국내총생산 (GDP)	2,408.7				
	비용자보수 1,170.4	영업잉여 495.9	순생산 및 수입세 203.2	고정자본소모 539.2	
국민총소득 (GNI)	2,443.4				
	1,170.4	495.9	203.2	539.2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34.7
국민순소득 (NNI) =시장가격 국민소득	1,904.2				
	1,167.9 ²⁾	533.0 ³⁾	203.2		
국민처분 가능소득 (NDI)	1,899.1				
	1,167.9	533.0	203.2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5.1	
국민총처분 가능소득 (GNDI)	2,438.3				
	1,167.9	533.0	203.2	-5.1	고정자본소모 539.2
국민소득(NI) =요소비용 국민소득	1,701.0				
	1,167.9	533.0			

주 :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3)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포함

자료: 한국은행(202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7쪽 <그림 IV-2-1> 재인용

V. NI 해석상의 한계와 경제 교육적 시사점

1. 교과서 정의와 한국은행 통계의 불일치

우리나라 대학 학부 거시경제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중 상당수는 미국 거시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 학자가 집필한 원서의 번역본¹⁴⁾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채택되고 있는 Mankiw의 *Macroeconomics*는 국민소득 관련한 거시 집계 변수를 GDP, GNP, NNP, NI, PI, DPI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득(NI)은 “NNP-통계상 불일치”로 정의하고 “경제 내 모든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는지 측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⁵⁾. 교과서상의 NI는 순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less subsidies)가 포함되는 항목으로, 전 장에서 살펴본 미국 BEA의 2003년 개편 이후의 NI 관련 정의를 미국의 표준 거시경제학 교과서가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미국 교과서와 번역본 또는 그에 기반한 교재를 사용하는 많은 국내 거시경제학 수업의 학습자들의 경우 미국 NIPA 기반의 NI 정의를 표준적인 정의로 학습하게 된다¹⁶⁾.

이에 반해 한국은행이 실제로 공개하는 NI 통계는 전 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NNI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명시적으로 차감한 요소비용 기준으로 정의되고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자가 집필한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경우 국내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이론과 자료를 서술하게 되어 NI를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국내 거시경제학 수강자가 미국 교과서로 NI를 학습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요소비용 기준의 NI와 상이한 개념으로 NI를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문제는 수강자의 학습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국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선택 차이에 기인하여

14) N. Gregory Mankiw (그레고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및 『맨큐의 경제학』, Olivier Blanchard (올리비에 블랜차드)의 『거시경제학』 등

15) Mankiw(2023) 거시경제학 제11판 번역본 32쪽

16) 구체적으로 Abel, A. B., Bernanke, B. S., Croushore, D.(2012). 「거시경제학」(제7판), Barro, R. J.(2009). 「배로의 거시경제학: 현대적 접근」, Blanchard, O.(2026). 「거시경제학」(제9판), Mishkin, F. S.(2012). 「거시경제학」 등의 한국어로 번역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미국 교과서들은 모두 NIPA 기반의 NI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Bos(2007)가 지적한 국민계정 통계의 오용 유형 중 “각국의 고유한 개념, 작성방법,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책 결정과 통계 해석의 왜곡”이 거시경제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 학습자가 경험하는 해석상의 어려움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미국 교과서로 NI 개념을 배운 학습자들은 여러 수준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NI 지표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인지에 대한 개념 인지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미국 교과서는 NI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순소득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두 정의가 포괄하는 경제적 실체의 차이로 인하여 NI라는 동일한 명칭의 거시 집계 변수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학습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NI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계산식 구성 항목과 결과적인 수치 규모에 대한 측면이다. 이미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NI를 미국 교과서는 “NNP - 통계상 불일치”로, 한국은행에서는 “NNI - 순생산 및 수입세”로 도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가 미국 교과서에서 배운 산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NI 수치를 마주했을 때, 수치의 규모와 구성 항목이 예상과 다를 수 발견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비교 층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학습자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NI와 미국 BEA에서 발표한 미국의 NI를 서로 비교할 경우 두 수치의 차이가 국민경제 규모의 차이인지 또는 국가간 NI 정의의 차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률이나 GDP 대비 비율의 지표 역시 국가간의 비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 장에서 살펴본 국민계정 국제 데이터 베이스가 통계의 오용과 오해를 조장하는 ‘statistical crimes’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Bos(2007)의 경고는 이러한 국가 간 NI 수치를 무분별하게 비교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대학 강좌에서 어떠한 교과서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학습자가 경험하는 혼란은 그 방향성만 달라질 뿐, 어느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

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미국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NI 수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구성 항목과 수치의 규모가 교과서의 정의와 산식과 다름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국내 학자들의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글로벌 기준의 학술 문헌이나 미국 BEA의 NI를 해석할 때 동일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이전 논의에서 주장하는 학습자의 부주의나 단순한 오개념 또는 교과서의 단순화, 추상화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간 통계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며 그 어려움이 개념, 산식, 비교의 세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한 교과서와 관련한 배경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결국 NI 지표에 대한 학습은 관련 정의나 산식의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서 해당 지표가 어떤 국민계정체계에서 어떤 목적과 산식에 따라 집계되는가의 제도적인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교과서 간 그리고 국가 간 비교에서 오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교육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NI 지표와 관련한 학습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혼란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 대학 학부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이든 국내 학자 집필 교과서이든 무관하게 NI 개념을 가르치는 경우 학생들에게 미국 교과서의 시장가격 기준 정의와 한국은행의 요소비용 기준 정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것처럼 두 정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정의라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습자가 한국은행의 NI 통계와 글로벌 기준의 학술 문헌이나 미국 BEA의 NI를 제대로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정의를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NI 지표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도출 산식을 엄격히 분리하여 지도하고, 나아가 이를 지표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 확장해야 한다. 양자를 분리하지 않고 가르치면 학습자는 결과적인 산식만을 암기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 통계 간의 불일치 등을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해석하기 힘들게 된다. 이를 분리함으로써 학습자는 단순히 어느 교과서의 산식이 옳은지의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간 지

표의 차이를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장에서 살펴본 Hansen et al.(2002)과 Halliday(2019)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경제 지표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정보로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의 한계와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정의와 산식을 분리하여 공부함으로써 학습자는 데이터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표가 어떠한 분석 목적과 어떠한 제도적 환경에서 정의되었는지를 읽어내는 데이터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통계 지표를 학습할 때 궁극적으로 그 지표의 정의뿐 아니라 그 지표가 어떤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어떤 분석 목적으로, 어떤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가와 같은 통계 지표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교육까지 일정 부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I에 대한 수업 시간에 해당 지표의 단편적인 산식 소개를 넘어 관련 국제 기준의 변화 흐름과 미국 및 한국이 채택한 제도적 운영모형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함께 다루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비로소 학습자가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고 정확하게 정보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교육적 관점에서 NI는 통계 지표들간의 국가간 비교 가능성에 대한 교육 도구로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학습자나 연구자가 타국 기관의 자료들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해당 통계의 명칭이 동일하면 당연히 실체도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해당 수치를 국가 간 직접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NI 지표 사례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이면에 있는 각국의 통계 편제 기준과 제도적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학습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거시경제학 수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NI 지표를 사례로 하여 국가간 국민계정체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학 학부 교과서 정의와 공식 통계 지표간의 불일치 현상과 이로 인한 학습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분석하고 학부 거시경제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학부 거시경제학 강좌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미국 교과서들은 1993 SNA 개정에 대응하여 기초가격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하도록 2003년 NIPA를 개편한 BEA의 NI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NI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순소득의 합계로 정의하고 순생산 및 수입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추계에 있어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수용하면서도, 분배 분석의 필요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요소비용 기준의 NI를 통계 지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NI라는 지표는 양국에서 명칭만 동일할 뿐 그 개념과 산식이 상이한 거시 집계 변수로 미국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NI 수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구성 항목과 수치의 규모가 교과서의 정의와 산식과 다름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념 혼란뿐만 아니라, 산식 구성 항목의 차이 및 국제 간 통계치의 직접 비교 오류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NI를 특정 통계 지표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적 정의와 공식 통계 수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불일치를 단순한 용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993 SNA 이후의 국제 기준 변화 및 미국 BEA와 한국은행의 상이한 제도적 선택이라는 맥락 위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특정 국가의 운영 모형에 따라 국제 기준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국가 간 통계 지표의 차이가 어느 한쪽의 오류가 아닌 각국의 분석 목적에 따른 객관적인 제도적 선택의 산물임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거시 지표 이해의 한계를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던 학습자의 부주의나 직관적 오개념, 또는 교과서의 단순화나 추상화 때문이 아니라 국가 간 통계 체계의 제도적 차이라는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셋째, 경제 이해력 또는 데이터 문해력에 관한 기존 연구를 국민계정 통계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통계 지표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통계 문해력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의 과제는 지표와 개념의 암기를 넘어, 지표가 위치한 통계 체계와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의 한계까지 함께 가르치는데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논문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한국 및 미국 공식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국가별 통계 정의 차이의 존재가 경제 지표의 이해와 해석의 어려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까지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학부 거시경제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실험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국민계정체계 내 특정 항목인 NI 단

일 지표로 한정하고 타 거시 지표로 분석을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NI에 국한되지 않으며, 통화지표(M1, M2, Lf, L 등)를 비롯해 각국의 제도적 선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다른 거시 집계 변수의 국가 간 비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며,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한국은행(2023), 2022년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 금요강좌 제926회 경제교육자료, 한국은행.
- _____ (2025), 우리나라 분배국민소득의 이해, 한국은행.
- _____ (202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Abel, A. B., B. S. Bernanke, and D. Croushore (2011), *Macroeconomics*, 7th ed., Pearson Education, 박성휘 · 김홍진 · 이충열 · 황진영 역(2012), 거시경제학, 제7판,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지필미디어).
- Barro, R. J. (2008), *Ma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Thomson South-Western, 장세진 · 홍찬식 역(2009), 배로의 거시경제학: 현대적 접근, Cengage Learning Korea(지인북스).
- Blanchard, O. (2025), *Macroeconomics*, 9th ed., Pearson, 최희갑 · 김성철 · 김지운 · 박승규 · 오종석 · 임성택 역(2026), 거시경제학, 제9판, 한빛아카데미.
- Bos, F. (2006), *The National Accounts as a Tool for Analysis and Policy*, Rozenberg Publishers.
- _____ (2007), *Use and Misuse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MPRA Paper No. 2270.
- Bowles, S. and W. Carlin (2020), What Students Learn in Economics 101: Time for a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8(1), 176-214.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4), *NIPA Handbook: Concepts and Methods of the U.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U.S. Department of Commerce.
- Goffe, W. L. (2013), *Initial Misconceptions in Macro Principles Classes*, Unpublished Manuscript.
- Halliday, S. D. (2019), Data Literacy in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50(3), 284-298.
- Hansen, W. L., M. K. Salemi, and J. J. Siegfried (2002), Use It or Lose It: To Teach Everyone Economics, an Opportunity to Enhance Economic Literacy,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463-468.
- Mankiw, N. G. (2023), *Macroeconomics*, 11th ed., Worth Publishers, 이병락 역(2023), 거시경제학, 제11판, 시그마프레스.
- Mishkin, F. S. (2012), *Macroeconomics: Policy and Practice*, Pearson, 송병호 · 정지만

역(2012), 거시경제학, 경문사.

Moulton, B. R. and E. P. Seskin (2003), Preview of the 2003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Changes in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Survey of Current Business*, 83(6), 17-34.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World Bank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United Nations.

_____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10), *UN National Accounts Questionnaire 1993 SNA Supporting Booklet*, United Nations.

<Abstract>

Discrepancies between Macroeconomic Textbooks and Official Statistics: The Case of National Income (NI)

Jaihyun Nahm*

This study analyzes the discrepancies between textbook definitions and official statistics using the National Income (NI) indicator as a case study, and derives pedagogical implic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American textbooks reflect the definition of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which reorganized the NIPA in 2003 to transition to a valuation system based on basic prices, thereby including net production and import taxes. In contrast, the Bank of Korea maintains the NI based on factor cost, which excludes these taxes, to serve the needs of distributional analysis. Consequently, although the NI indicators of both countries share the same name, they differ in concept and calculation formula. This structural discrepancy suggests that learners may experience interpretive difficulties when understanding the concept, interpreting the calculation formula, and comparing statistics across countries.

Key words: National incom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Economic education, Economic literacy; Macroeconomic indicator education

원고접수: 2026년 07월 20일 심사일: 2026년 07월 22일 ~ 2026년 08월 24일
게재확정: 2026년 08월 24일

* First Author/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okmin University (jnahm@kookmin.ac.kr)